

2019.03.21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미래형 대입제도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 ①

■ 토론회

‘국민통합입시’를 탐색한다.

- 서울대 100% 지역할당제 -

주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일시: 2019. 03. 21. (목) 오후 6시 30분

서울대 신입생 100%를 지역할당제로 선발하는 ‘국민통합입시’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3월 21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미래형 대입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7차례 연속토론회 중 첫 번째로 서울대 신입생 100%를 지역할당제로 선발하는 대입 모형인 ‘국민통합입시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국민통합입시’란, 현재 23% 정도의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인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100%로 확대하고 나아가 주요 사립대에까지 이 제도를 확대해서 입시 경쟁의 고통으로부터 아이들을 살리자는 취지로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제안한 방안입니다. 특히 현 입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소프트웨어만 수정해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교 내신은 절대평가를 도입해 입시의 근간으로 삼아 공교육을 살리면서도, 고교과정만 이수하면 쉽게 치를 수 있는 수능으로 내신이 동점인 경우 변별력을 발휘하도록 표준점수를 제공해 공정성을 높이며, 내신과 수능으로도 변별력이 없는 학생들에 한해 비교과 전형을 도입함으로써 비슷한 지역과 계층의 학생 간에만 비교과 경쟁이 이루어져 부모의 재력과 능력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제안자에 따르면, 이렇게 할 경우 굳이 특목고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아도 그에

상응하는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은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입시 제도를 사립대학으로 확대하되 이에 동의하는 대학의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의 아이디어입니다.

이 같은 제안은 한편으로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상위권 대학 입시 경쟁과 그 대학 진학을 위한 1차 관문으로서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같은 고교 입시, 그를 둘러싼 뜨거운 사교육 경쟁을 생각할 때, 의미 있는 제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이 정책이 국민통합 전형으로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기대되는 정책 효과는 얼마 만큼인지, 균형 선발의 기준을 ‘지역’으로 설정한 근거의 타당성은 얼마나 있는가, 더 적절한 기준은 없는지, 주요 사립대들로 확대하는 방안의 현실성은 충분한가의 문제 등 현실 속에서 이를 제도로 정착시킨다 할 때 예상되는 수많은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은 지금 도무지 짝 막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현 대입제도의 난맥을 뚫고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안임은 틀림없습니다. 이에 3월 21일(오후 6시 30분) 우리는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그의 중심 아이디어를 듣고, 정책으로서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9. 3. 21.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목 차

발 제

- 제 1 발제: 조기숙(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
“다양성(창의성) 교육을 위한 국민통합입시”

토 론

- 제 1 토론: 구분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15
“국민통합입시’의 효과성에 대한 탐색”
- 제 2 토론: 이성대(신안산대학교 교수) 21
“다양성(창의성) 교육을 위한 국민통합입시 토론문”
- 제 3 토론: 이기정(서울 구암고등학교 교사) 27
- 제 4 토론: 백선숙(학부모) 29
“백년지대계? 당장 10년 교육을 살리는 입시 대책이 절실하다!”

■ 제1발제

다양성(창의성) 교육을 위한 국민통합입시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들어가며>

촛불혁명의 기대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많은 진전을 이뤘고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지만 최근 몇 가지 정책실패로 일부 민심이반을 경험하는 중이다. 그 중 하나가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은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기에 등장하는 부의 양극화, 높은 청년 실업, 낮은 출산율, 노인 빈곤 등의 난제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의 부동산 폭등은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만들었다.

엘빈 토플러, 폴 케네디 등의 미래학자는 한국의 미래는 교육문제 해결 없이는 밝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앞의 모든 문제는 서로 얽혀 있어 이 실타래를 푸는 열쇠는 교육문제의 해결에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가 없는 2019년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을 때이다. 우리나라가 교육지옥이고 교육을 망치는 주범이 대학입시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평가나 입시도 교육의 중요한 일 부분임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꼬리에 해당하는 입시가 교육이라는 몸통을 흔들고 있는 형국이다.

대학입시를 개혁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접근법은 1) 현 입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 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모색 3)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실행계획 제시 4) 공론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입시개혁 추진의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우리 입시의 문제와 그 문제의 원인 진단에 대해선 대다수 국민이 큰 어려움 없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병에 대해서도 의사마다 처방이 다르듯 문제에 대한 진단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대안 마련에서는 자신의 철학과 지향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럽다.

새로운 해결책은 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의 이해관계도 모두 만족시켜야 하기에 대안 마련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대입제도는 사회 제 집단 간의 이해관계의 최종 타협안이 될 것이므로 제 집단 간은 대안 제시에 앞서 큰 원칙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를 필요가 있다. 원칙에 대한 합의 없이 대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는 극한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원칙에 대해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대안 제시 이전에 선행되어야 한다.

대안을 제시하는 집단도 자신의 철학과 지향만 고집할 게 아니라 어떤 대안이 적어도 압도적 다수를 형성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대안은 현실에 적용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왜 우리아이들은 대학에만 가면 바보가 될까> <아이를 살리는 교육>, 특히 <지금 당장 교육을 빅딜하라>에 나오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현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고, 3절에서는 원인에 대한 진단을 제시하고 4절에서는 원칙과 대안, 그리고 끝으로 이 대안을 실천하기 위한 실행계획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현 입시 제도의 문제점>

대한민국 입시는 미쳤다. 지난 5월 EBS에서 방영한 <대학입시의 진실> 6부작은 현 입시제도의 현실을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¹⁾ 우리 입시는 한 마디로 교사에게는 불필요한 과중한 업무, 학생에게는 불확실성 앞에서 목적도 모르고 해야 하는 끝없는 학습과 스펙쌓기, 학부모에게는 학생보다 더 큰 책임과 불확실성, 그리고 자책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 입시의 문제는 너무나 많지만 일단 다음과 같이 열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1) EBS. “대학입시의 진실” 6부작. 2017년 5월.

첫째, 우리 입시의 가장 큰 문제는 평가란 이름으로 교육을 배제시키고 학생을 소외시키는 폭력이나 다름없다는 점이다. 학생은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평가의 대상으로 전락함으로써 교육에서 학생의 소외, 그로 인한 교실의 황폐화가 심각하다. 인간은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주도할 때 자신에 대한 존엄감도 느끼고 자신감이 생긴다. 그러나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아니라 평가의 대상으로 전락하면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호기심과 자신감을 잃게 된다. 우리 학생들이 과도한 학습량으로 인해 PISA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둘지 몰라도 자신감과 호기심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게다가 학습의 내용이 주로 문제풀이식으로 이루어진다면 학생은 수동화되고, 정답을 알고 있는 권위적 존재에게 굴종하도록 만든다. 여기에서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짙게 된다. 학원에서 학생에 대한 차별이 용인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둘째, 전교생을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는 상대평가로 인해 1등은 그 자리를 언제 뺏길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2등부터 나머지 학생들은 루저라는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가장 신뢰하고 협력해야 할 학우를 잠재적 적으로 만든다. 시험 때면 책과 노트가 분실되는 비양심적 현상이 바로 우리 학교이다. 이로 인해 교육은 모든 학생을 불행하게 만든다. 상대평가는 학생에게 끝없는 경쟁을 강요하며, 내 성적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다른 학생의 성적에 의해 결정되기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한다. 상대평가는 교사의 평가권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인권과 교육의 시각에서 가장 먼저 폐기되어야 할 건 내신 상대평가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우리 학생들은 주 55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의 학습시간을 기록한다. 특목고 학생의 학습시간은 이보다 더 많아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가 모두 억압되는 인권 침해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는 지식경제 사회이고 선진국은 모두 평생학습의 시대에 돌입했다. 우리는 학창시절 과도한 학습에 질려 성인 1인당 독서량이 OECD 국가 중 최저에 이른다. 평생교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로 인해 파생하는 실업문제나 새로운 일자리에 필요한 교육에 있어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넷째, 성적이 가장 공정하다는 신화는 입시를 사실상 부모의 재력과 학력 경쟁으로 치환해 교육을 통한 신분 세습을 강화한다. 고려 광종에서 시작된 과거제도에서 비롯된 성적 공정성에 대한 신화는 뿌리가 깊다. 특히 산업화시대의 문제풀이식 입시와 고시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기제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성적에 의한 입시가 가장 공정하다는 환상이 우리 사회엔 광범위하게 남아 있다. 주관식 시험이나 프로젝트보다는 객관식 시험이 선호되는 이유

도 바로 공정성 신화에서 비롯되기에 하루아침에 깰 수 없다. 그런데 성적은 어느 나라나 부모의 재력이나 학벌과 상관관계가 높고 우리는 그 정도가 더욱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성적에 의한 입시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는다. 과거에 모두가 못 살던 시절에는 교육이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되었지만 빈부격차가 심해진 요즘엔 신분을 강화하는 에스컬레이터가 되었다는 점에서 성적 공정성 신화의 결과는 참담하다.

다섯째, 성적에 의한 입시는 학벌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이미 존재하던 학벌은 최근 입시를 통해 그 서열이 보다 강고하게 고착되고 있다. 과거엔 소수 명문대와 2차 명문대들이 다양하게 존재했다면 최근엔 1등부터 10등까지 고착된 서열이 존재한다. 고교 졸업생 다수가 대학에 진학하는 나라에서 취업은 점점 힘들어지고 복지는 부족하니 모두가 학벌에 목숨을 거는 그야말로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의 학교가 되었다. 우리 교실은 과거엔 잠을 자는 곳이었다면, 얼마 전까지는 떠드는 교실이 되었다. 최근에는 자해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런 폭력성이 타인에게 가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런 징후가 이미 곳곳에서 묻지마 폭행, 살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부모의 재력과 학력의 반영인 성적에 의한 입시는 대학 내 다양성을 실종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며 계층 간 담벼락을 만들고 있다. 서로 배경이 같은 사람들만 모이면 경험의 제한으로 인해 다양성 교육이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창의성을 저해한다. 창의성은 서로 다름이 충돌할 때 그 다름을 극복하기 위해 발현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객관식 문제 풀이 교육으로 획일화된 아이들의 두뇌는 비슷한 배경의 아이들을 만남으로써 개방성, 유연성, 창의성 발달이 저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곱째, 대학 내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적 배려자 전형, 지역균형 전형, 농어촌 전형 등으로 입학한 학생은 사배층, 지균층 등으로 불리며 대학생 집단 내 또 다른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수자 집단에 대한 할당입시는 낙인찍기 효과를 가져와 오히려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역기능하고 있다.

여덟째, 창의력 교육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학생종합부 전형을 도입했다. 이 중에는 사회적 배려자 전형이나 농어촌 전형 등 소수자에 대한 할당으로 보다 다양성을 강화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종합부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14년 이후의 지역별 학교별 서울대 입학 통계는 충격적이다. 지방 일반고의 사실상 전멸이라고 할 수 있다.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앞으로는 특수고교 명칭)가 아니면 서울대 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종은 명문

고 출신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며, 봉사활동, 입시 포트폴리오 만드는 것도 부모와 컨설팅 회사가 대행하고 있기에 공부 못하는 금수저가 명문대 진학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학종의 보다 심각한 문제는 거짓과 위선이 입시에 난무하면서 성적공정성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학종 폐지, 수능 백퍼센트 입시, 본고사 부활에 대한 여론이 높은 이유도 바로 학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아홉째, 우리 명문대는 높은 입학 경쟁률을 자랑하지만 세계적으로 낮은 대학 경쟁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학생들을 끊임없이 공부시켜서 대학경쟁력이라도 높으면 다행이지만 대학경쟁력 산출에 학생 성적의 우수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부분 세계적인 대학경쟁력 측정은 교수의 연구업적, 노벨상 수상 여부, 장학금 액수, 학교 시설, 교수 대 학생 비율 등 학생과 무관한 지표로 측정되기 때문이다. 학생과 관련된 건 유일하게 졸업생의 취업률과 취업의 질이다. 그런데 학벌이 좋은 대학은 졸업생의 취업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명문대 교수들은 치열하게 가르치기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 대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우수한 학생을 입도선매하려고 경쟁한다. 학벌은 교수나 학생이 획득한 특권에 머물러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도록 만드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 학벌은 명문대의 대학경쟁력이 제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열째, 입시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학,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장학금) 등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 혹은 중산층 자녀들은 학비를 벌기 위해 대학을 다니다 휴학하다를 반복하게 되고, 대학에 오면 모든 것이 이뤄지리라 믿었던 학생들은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학벌이 만들어 놓은 대학서열화는 자신에게 맞는 철학이나 특성을 가진 대학에 대한 고민을 배제하게 된다. 만일 학생이 원하는 드림대학을 선택하면 장학금도 패키지로 따라온다면 학생은 학벌과 무관하게 드림학교를 선택해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학벌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의 대학에 대한 만족도도 높여주게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교실은 무너졌지만 학원은 성업한다는 점이다. 요즘은 학원도 전성시대는 갔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출산율의 저하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공교육보다는 사교육기관이나 인터넷 강의가 성업하고,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 비율이 월등 높은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앞의 열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높은 사교육, 사립 의존도 모두는 교육에서 공공성 실종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등장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겠다.

<입시 문제 원인에 대한 진단>

우리 입시는 애초부터 중,고교 학교의 서열화와 과도한 성적 경쟁으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이 염려될 수준이었다. 하지만 중등 평준화에 이은 고교 평준화는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만큼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대학 입시 경쟁은 여전히 치열했지만 과거에는 본고사가 있어도 과외를 시킬 수 있는 집안이 한정되었고, 대학 진학률이 20-30%밖에 되지 않았기에 대입경쟁이 지금처럼 심각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대학입시가 개천에서 용 나오는 기제로 작동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팽창기인 1980-90년대에는 대학 졸업자가 실업에 시달리는 일도 없었기에 성적이 입시의 가장 공정한 잣대라는 환상을 더욱 강화했다. 따라서 1970-80년대에 입시를 치른 현재의 정책 결정자들이 달라진 경제적 조건과 사회 환경은 고려치 않은 채 지금도 여전히 객관식 시험 성적이 공정하다고 믿는다면 입시 문제 해결은 요원하게 된다.

현재 대학 입시의 골격은 김영삼 정부의 5.31교육조치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산업화시대의 획일적인 인재를 키우던 방법에서 벗어나 세계화시대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한다는 명목으로 미국 제도를 본 따 만들었다. 5.31교육조치는 21세기를 대비하는 새로운 교육정책의 대안을 여야합의로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정부도 5.31교육조치를 존중했으며 그 틀 안에서 약간의 수정을 하는 선에서 유지 계승해왔다.

대학입시도 성적으로 줄 세우지 않고 인성과 창의성을 골고루 키울 수 있도록 ‘학교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특목고, 특성화고이다. 5.31교육개혁안의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평준화를 무너뜨리고 다양한 학교를 만든다는 명목 하에 다시 고교 서열화를 초래했다. 그 후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된 자율형 사립고는 고교 서열화와 교육양극화를 더욱 부추겼다. 개천에서 더 이상 용이 나지 않는 이유도 5.31조치와 그 결과 탄생한 미국식 대학 입시 때문이다.

여기엔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왜 원래 목적했던 창의성 교육은 사라지고 의도와는 정반대로 교육이 신분을 고착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게 되었는가? 둘째, 똑 같은 제도를 도입했는데 왜 미국은 교육천국, 우리는 교육지옥이 되었는가? 미국입시에서는 교육의 형평성이 강조됨으로써 여전히 교육이 신분 상승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비해 왜 우리는 교육이 신분을 강화, 유지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창의성 교육을 명목으로 미국 입시 제도를 들여왔지만 미국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권’ 과 ‘공공성’ 을 빼놓고 껍데기만 들여와서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제도를 이식할 때에는 뿌리 채 들여와 그 뿌리가 우리 토양에 착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과 풍토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 입시제도의 가지만 꺾어다 우리의 유교 전통에 접목시켰다. 중국고사에도 나오지만 강남의 굴을 강북에 심으면 탕자가 된다. 우리 입시가 괴물이 된 건 미국 입시의 정신을 들여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 대학입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첫째, 미국입시의 정신은 빼놓고 껍데기만 들여온 5.31 교육조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여기에 성적으로 한 줄세우기 입시가 가장 공정하다는 유교문화의 유산이 결합되면서 괴물이 되었다. 셋째, 여기에 덧붙쳐 미국입시의 디테일한 운영원리에 대해 잘 모른 채 여러 줄 세우기 입시, 입학사정관제, 학생종합부 전형 등을 도입한 좌우정부와 진보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합작해 현재와 같은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불공정해보이는 입시가 탄생하게 되었다.

우리 입시의 문제와 문제의 원인을 위처럼 진단할 때, 지난 교육공론화위에서 논의했던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조정하고, 수능 절대평가 등급제를 도입하니 마니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결론을 위해 공론화위는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사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우리 입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5.31교육조치의 기본으로 돌아가 우리가 미국에서 도입하지 못한 인권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세부 운영원리에서 성적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도 성적 이외에 학생의 잠재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입학사정관제, 학생종합부 전형 등을 보다 공정하고 우리 문화에 맞게 운영할 세부 규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교육에서 공공성은 평등(equality)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 즉 형평성(equity)을 통해 구현된다. 타고날 때부터 특정 재능이 부족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능력이 뛰어나거나 집안이 유복한 아이들과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도록 하는 것이 평등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부족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출발선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기회의 평등이 바로 형평성이다. 한 캐나다 교육학자가 교육과 형평성은 같은 개념이라고 할 만큼 형평성은 교육의 핵심 개념이다. 부모의 부나 학력이 낮아 아직 계발되지 않은 학생은 몇 계단 위에서 출발해야 공평한 경쟁이 된다. 진보진영이 이 핵심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대신, 부모의 재력이 영향을 미치는 학생종합부 전형 확대를 주장하며 수능을 무력화시키는 건 에스컬레이터는 그대로 둔 채 계단 몇 개만 없애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미국입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라진 인권과 공공성은 무엇인가. 미국 교육제도의 기저에 흐르는 정신은 교사나 학생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 개념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개인주의에서 출발한다. 교육은 사람을 다루는 일이고 따라서 학생이나 교사의 인권은 교육의 중심 가치이다. 그러나 수월성과 자율성, 다양성을 강조했던 우파는 교육주체가 아닌 교장이나 대학의 자율권만을 강조하느라 학생과 교사의 인권은 무시했다. 그 결과, 우파의 수월성, 다양성 교육은 현재 교육지옥의 주범이 되었다. 진보는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며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했지만 상대평가를 용인함으로써 학생인권은 물론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고 있다.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공공성을 빼고는 논의가 불가능하다. 공공성은 좌파 학자들이 늘 강조해왔다. 하지만 공공성이 인권과 결합하지 않으면 자칫 평등하고 획일적인 교육으로 빠질 우려가 있다. 인권은 다양한 대안으로부터 선택하는 개인적 자유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인권과 공공성은 미국 대학입시에서 소수약자를 배려하는 적극적 조치와 대학의 사회적 책임으로 지켜졌다. 우리 입시는 미국입시를 그대로 들여왔지만 정신은 빼놓고 겉모습만 베껴왔다. 미국 입시의 정신이 없으니 과거제도의 유산과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입시와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맞도록 인권과 공공성의 가치를 살려 현재의 제도를 변화시킨다면 우리도 미국처럼 제한된 입시 경쟁으로 초중고는 교육천국, 대학은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미국도 1960년대까지는 입시 경쟁이 치열했다. 대부분의 명문대를 합숙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한 유대인이 독점했다. 이러한 흐름을 꺾은 건 1961년 케네디대통령의 행정명령 10925였다. 케네디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고용에서 소수인종과 여성 등 역사적으로 차별 받아온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할당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가 대학에 다양성을 강화하는 균형입시로 도입된 계기는 1970년대 초 하버드 대학의 행정직을 맡은 Walter J. Leonard 박사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된다. 하버드대학은 대학입학과 장학금 수여에서 인종, 사회계층, 모국어, 지리적 위치, 부모의 유무, 성별을 고려하는 Havard Plan을 마련해 미국 전역 다른 대학의 모델이 되었다. Leonard 박사는 입학정책을 디자인하기 전에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Derek C. Bok교수가 학장을 역임할 당시 그의 특별보조관으로 임명돼 다양한 지원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실험적으로 실시했었다.²⁾

미국에서 인종, 성별, 지역을 입시에서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에 의해 키워진 학생의 걸음으로 드러난 성적보다는 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학생의 잠재력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그걸 학생종합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미국대학은 부모에 의해 키워진다고 생각한다. 부모 잘 만난 아이들은 잠재력이 이미 많이 계발되었다고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는 아직 계발될 잠재력이 남아 있다고 판단해 더 많은 기회를 준다. 미국입시에서는 성적보다는 부모에 의해 키워지지 않은 아이들의 잠재력이 더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인종, 성별, 지역을 고려하는 것이다. 즉, 역사적으로 차별받은 사회적 집단에 소속된 학생에게는 적극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적 위주의 입시를 하다 보니 성적이 좋은 사람은 노력을 많이 했기에 명문대학에 갈 자격이 있으며, 그것이 공정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은 대학교육이 보상이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에게 더 좋은 교육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형평성(equity)에 맞다고 생각한다. 좋은 집안의 자녀들은 좋은 대학교육을 받지 않아도 앞으로 먹고 사는데 별 걱정이 없기에, 그렇지 못한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저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교육의 본질은 형평성에 있다고 믿는다.

결과적으로 우리 입시의 문제는 인권과 공공성의 정신을 살려, 학생의 성적보다는 잠재력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성적은 차선으로 공정성의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미국처럼 학생의 사회적 배경의 다양성을 극대화한다면 학생은 서로 다른 배경의 학생으로부터 더 많이 배우고, 다름 속에서 갈등도 경험하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창의력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 글에서 제시하는 국민통합입시이다. 다음 절에서는 입시개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원칙과 대안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새로운 제도 협상을 위한 원칙과 대안>

원칙을 먼저 세우고 합의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서로 다른 대안이 충돌할 때 원칙으로 돌아가면 해결책이 보이기 때문이다. 위의 입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만족시키는지 먼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원칙은 필자 개인의 생각이므로 제 집단이 모여 함께 합의할 수 있는 원칙을 먼저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John B. Williams. 1992. "Affirmative Action at Harvard,"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23:207-220.

새로운 대안이 만족시켜야 할 원칙

1. 입시가 교육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아이는 행복하고, 교사는 보람있고, 학부모는 신뢰하는 교육
2. 가능하면 제도의 큰 틀에선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디테일한 운영원칙을 수정함으로써 혁신의 효과를 얻는다
3. 경쟁보다는 협력을 격려한다
4. 21세기 인재가 필요로 하는 창의력 교육을 강화한다
5. 학벌을 완화시키는 입시제도를 만든다

위의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앞에서 논의했던 우리 입시 문제의 원인을 보완하는 게 대안 마련 작업이 될 것이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우리 실정에 맞게 미국처럼 입시에 적극적조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모의 재력과 지역이 아이들의 성적을 좌우한다면 부모의 재력과 지역을 성적에 앞서 입시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미국은 인종이 가장 큰 차별의 변수였다면 우리는 지역적 격차가 부모의 재력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의도 사실상 지역적 격차에서 비롯되었고,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과의 교육적 격차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서울대는 정운찬 총장시절 이미 30% 가량의 지역균형선발을 도입한 바 있다. 서울대는 국립법인이지만 운영비 전체를 국민세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서울대가 백퍼센트 지역학교균형선발을 도입한다면 지방의 국립대 서울의 명문 사립대 더 나아가서 전국의 모든 대학에 이러한 정신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서울대가 백퍼센트 지역학교균형선발을 하도록 국민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 균형 선발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미국과 달리 특목고, 자사고 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특수학교의 비율이 우리보다 현저히 낮은 미국에서도 학교할당을 한다고 할 정도로 학교 간 균형선발을 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특목고, 사립보딩스쿨 학생들은 대학 입학시에 불이익을 받는다. 즉, 대학 입시에서 출신 고등학교의 다양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지역균형선발만 하게 되면 지방의 특목고, 자사고가 짝씩이할 우려가 있어 일반고의 다양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조치는 내신성적 산출 방법의 개선과 함께 절대평가 등급화하는 것이다. 내신은 4지선다 객관식 시험을 지양하고 수행평가, 지필고사 등 교사별 평가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학

생은 교사를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럴 경우 학생들이 교사의 주관적 평가를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 평가에 학생을 참여시켜 투명성을 보장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문제는 운동의 핵심적 부분이라기보다는 부차적 문제이므로 차후 다른 기회에 다시 논의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

수시의 비율을 30% 이내로 줄이고 특기자와 드림학교를 원하는 학생만 수시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정시로 선발한다. 정시에서는 내신교과를 통해 1차적으로 거르고, 그 다음 수능으로 변별한다면 수능은 몰수능이 되어도 될 것이다. 이는 성적 공정성에 대한 환상도 만족시켜주면서 이미 균형입시를 실시했기 때문에 변별력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시에서도 1차로 내신 교과를 사용하게 되면 학교 현장이 수능 때문에 무너진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입시를 받아들이는 대학에 대해선 그 틀 내에서 입시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합리적인 입학사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엔 자율과 분권만이 국민통합입시의 효과를 제대로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성은 개인 입학사정관이 아니라 복수의 입학사정관이 토론을 통해 종합적 평가(comprehensive review)를 통해 성취될 수 있다. 성적으로 변별이 가능한 학생은 성적으로 1차 컷을 하고, 성적으로 변별이 불가능한 학생에 한해 입학사정관제를 적용하되 공공입학사정관(교육부의 교육과정을 이수 후 자격증을 획득한 전직 교수 및 교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시민 입학사정관)을 포함한 3명의 입학사정관이 민주적으로 토론을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투명성은 외부에서 공공사정관이 투입됨으로써 담보할 수 있다. 입학사정의 모든 사항을 공개할 순 없지만 언제나 내부 비리를 고발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인이 투입됨으로써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학종의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 학종에서 보는 주관적 평가는 담당 교사에 의한 내신이 소화할 것이며, 비교과는 필요한 대학의 경우 대학에서 알아서 면접이나 현장수필테스트 등을 통해 파악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우리는 현장이 아닌 곳에서 작성되는 서류는 믿지 않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종은 두께 경쟁이 되었고 입학컨설팅 회사에 의해 오염되었다. 솔직히 대학에서 입학사정 시 학생종합부를 자세하게 볼 시간도 없다. 담당 교사가 알아서 점수로 간단하게 보내주는 게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되면 학생부는 외국처럼 2-3페이지면 충분하다. 균형선발을 위한 학생 추천은 교장이 아니라 고3 교사들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회의(회의록 작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까지 봐왔던 것처럼 진보적 시민단체의 이상적인 입시안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다.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효율성, 효과성과 이상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통합 입시 도입을 위한 실행계획>

국민통합입시가 정치권의 정쟁에 물들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이 순수한 마음을 지닌 시민과 시민단체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권이 끼어드는 순간 정쟁으로 변질돼 팽팽한 대립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진보적 단체로부터 시작이 되더라도 중도적 단체를 설득하고 보수적 시민단체나 인사까지 합류한 후에 청와대 청원을 통해 이슈를 만든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통합입시는 쟁점 자체가 쉽지 않고 설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단위로 세미나, 토론회, 강연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실행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구상할 수 있다.

0. 2019년 1월 - 2월 공동연구 (미국, 싱가포르, 대만 입시 사례연구)
공동연구를 통해 대안에 대한 오너십 공유 필요
1. 2019년 2월 - 3월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한 공론화 작업 (국회=>전국 확대)
2. 2019년 2월 - 4월 최초 발의자로 만 명의 온오프라인 서명 받기
3. 2019년 5월 - 국민통합입시 도입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설치
4. 2019년 6월 - 8월 운동과 공론화 작업
각 시도 지사, 교육감의 지지선언 유도
5. 2019년 9월 - 10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청원
6. 이후 국가교육위에서 의제 채택 및 공론화위에서 세부 사항 결정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울대가 백퍼센트 지역학교 균형입시를 받아들여도록 한 다음, 지방 국립대, 사립대로의 전파를 위한 운동 계획이 있어야 하고 입시의 세부사항(수시, 정시, 내신, 수능, 학생종합부 등 모두 조금씩 손을 봐야함)을 세련되게 조율할 공론화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 할당의 경우는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고교에 각 한 명씩 할당을 하고 나머지를 다른 학교에 할당하는 안을 필자는 제안한 바 있지만 공론화위에서 각 학교의 최대 학생수와 최소 학생수의 비율(예를 들어 2배에서 5배 이내)만 정하고 나머지는 대학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다. 규모가 작은 고등학교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격년, 혹은 3년에 한 번씩 선발하는 것도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더 이상 교육을 이대로 나누고 있는 우리의 미래도 없다. 무엇보다 문재인정부가 북미관계에서 진전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 교육에서 희망을 주지 않는 한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는 것이 부동산, 혁신 경제 등 모든 사안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며,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그만큼 높이게 될 것이다. 2019년이 교육운동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에 뜻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의 동참과 공동행동을 제안한다.

■ 제1토론

‘국민통합입시’의 효과성에 대한 탐색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조기숙 교수의 발제문에 제시된 문제의식과 새로운 대안을 위한 원칙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의한다. 지나친 입시 경쟁으로 대한민국의 청소년이 입시지옥을 살고 있는 현실은 5.31 개혁 당시부터 해결과제 1순위로 등장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입시지옥이다. 과거에는 입시지옥을 고등학생만 겪는 성장통이라고 치부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영재학교, 과학고, 특목고, 자사고에 들어가기 위해 중학생들까지 입시지옥을 살고 있다. 초등학생도 예외는 아니다. 고교와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고 채용 시장에서 학력과 학벌로 차별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에 입시지옥의 문은 좀처럼 닫히지 않고 있다. 입시지옥의 문제도 문제지만 이 지옥문을 통과해도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소수의 상류 계층이 학력 학벌의 우위를 점유하고, 그것이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니 입시지옥을 통과하면 헬조선이 열리는 구조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제자가 제안처럼 ‘국민통합입시’를 도입해 현 입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소프트웨어만 수정해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은 소위 ‘대박’이라고 읽어야 할 것이다.

조기숙 교수의 발제문과 저서 「지금 당장 교육을 빅딜하라」를 읽으며 파악한 ‘국민통합입시’의 기대효과를 크게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된다.

1. 고교와 대학의 서열체제 완화 혹은 해소
2. 입시경쟁 완화로 인한 학생 인권의 보장
3. 학부모의 높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
4. 미래 역량(창의성) 중심으로 학교교육을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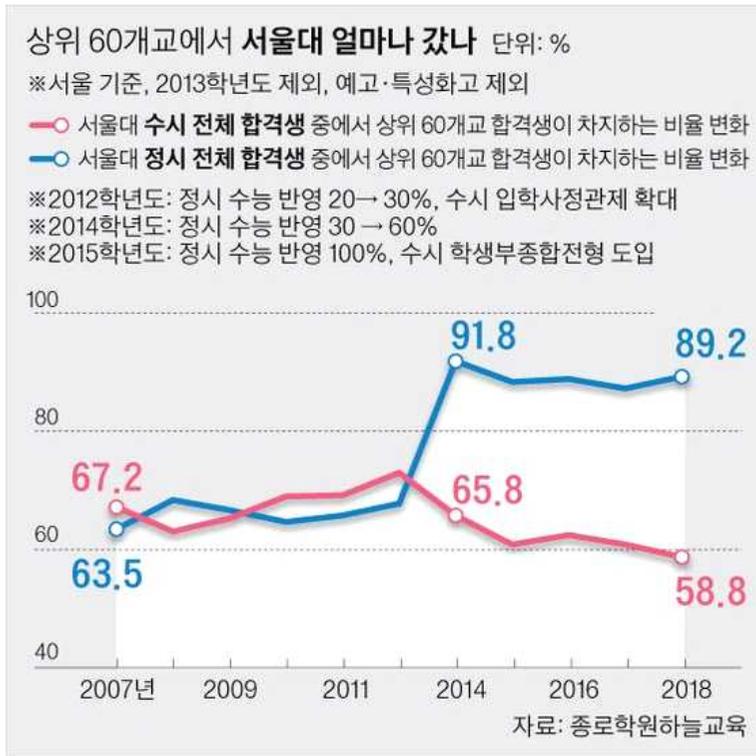
그리고 이러한 기대효과를 누리기 위한 국민통합입시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서울대가 백퍼센트 지역학교균형선발로 전환으로 출신고교의 다양성을 극대화함.
- 최소한 한 학교에서 한 명은 서울대 입학 보장
- 나머지 입학생은 17개 광역시도별로 할당, 대도시·도시·읍면 단위 취학 학생 비율만큼 입학생을 할당
- 실질 내신 반영률 50% 이상, 내신 절대평가 도입 이후 변별력 저하는 1차 수능, 2차 비교과(입학사정관 참여)를 활용해서 보완
- 사회적 배려자, 부모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에게는 수능 점수에 가산점 부여
- 2. 서울대 방식의 지역학교균형선발을 도입하는 대학을 확대
- 3. 고교내신 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 실시, 교사별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객관식 시험을 지양하고 수행평가, 지필고사 등 교사별 평가가 원칙(국민통합입시의 전제 조건은 아님.)
- 3. 수시 비율 30%·지원횟수는 1회로 축소, 정시는 다단계 전형(1단계: 내신교과, 2단계: 수능, 3단계: 면접)·지원횟수 8회까지 허용
- 5. 정시 동점자 처리 방안으로 입학사정관이 참여하게 될 경우 외부 배심원을 포함해 토론을 통해 최종 합격자 결정
- 6. 선발 학생의 수가 많을 경우 정시에서는 에세이 고사(주제는 봉사, 취미, 적성과 관련한 자기소개 중심)를 활용
- 7. 특목고 자사고는 선지원 후추첨제로 전환

하지만 위의 방안을 현실 입시에 대입해서 상상하게 되면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고교 서열화 완화에는 효과적, 대학 서열화는...

현재 상황에서 국민통합입시는 다른 변인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대가 도입을 결정한다면 2022학년도부터 당장 실시가 가능하다. 재차 강조하지만 서울대가 도입을 결정한다는 전제 하에서이다. 작년 8월에 2021학년도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 발표되었고 이것에 의거해 각 대학은 2021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기 직전이다. 따라서 2021학년도 입시를 국민통합입시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2022학년도부터는 대학이 결정한다면 가능하다. 2022학년도 대입부터 서울대가 국민통합입시를 시행해 신입생의 출신 고교가 인가된 모든 고교에 ‘1+ α ’로 할당된다면 현재처럼 서울대 입학 순위로 고교가 서열화되는 상황에 분명 균열이 간다는 판단이다.



서울대 합격생 분포를 보면 매해 수시의 90%, 정시의 60% 가량을 60개 고교에서 차지하는 상황이다. 최근 ‘강남 A고 1년에 14명, 금천 B고 12년에 1명 서울대 합격(중앙일보, 2019. 3. 13.)’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는 서울대 합격자가 특정 학교,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분명 국민통합입시는 이러한 현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특목고, 자사고, 강남지역 등 서울대 합격생을 다수 배출하는 고교에 대한 선호도는 하락할 것이다.

그동안 대학서열화를 결정하는 지표는 정시 배치표였다. 정시 배치표 기준의 서열에서 부동의 1위였던 서울대의 서열이 흔들릴 여지는 분명하다. 그렇다면 다른 대학은 어떻게 될까? 서울대 서열만 흔들리고 나머지 대학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통합입시는 서울대에서 사립대로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 전제가 현실에서 실행된다면 대학서열화 완화 효과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서울대에서 확대되는 기간은 최대한

짧아야 된다고 본다. 서울대뿐만 아니라 사립대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분명 필요하다.

2. 지원 자격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

입시 경쟁을 완화해 입시지옥을 사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은 우리 교육이 당면한 과제이다. 어떻게 입시에 매몰되지 않고 여가시간을 확보하는 등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을까? 이 역시 2022학년도에 서울대 100% 지역학교 할당제가 도입된다는 전제 하에서 생각해 보았다. 현재 고교내신이 상대평가 체제인 상황에서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에 학교장 추천을 받는 학생은 대부분 전교 1, 2등 학생이다. 점수로 줄 세워진 성적이 공정하다는 신화를 굳게 믿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성적순으로 추천하는 것이 가장 시시비비가 없다. 그렇다면 인가된 전국 고교에 $1+\alpha$ 로 서울대 신입생을 할당하게 된다면 당연히 추천되는 학생은 전과 동일한 방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통합입시의 효과는 반감된다. 오히려 부작용이 예상된다. 전교 1등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이 전제조건이라면 이러한 현상은 완화되겠지만 문제는 어떤 학생을 추천할 때 공정한 추천이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학과별 모집을 실시하는 현재 대입 구조로 볼 때 할당된 학생을 어떤 학과에 배정할 것인가가 현실적인 해결 과제로 남는다. 즉 입시경쟁을 완화해 입시지옥을 사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려면 국민통합입시로 선발할 학생의 지원자격을 입시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사교육 과열지구의 온도는 감소, 동네 보습학원은 고온

입시와 관련해 현재 사교육비 상승의 주요원인 크게 두 가지로 고입과 대입이다. 국민통합입시가 도입되면 특목고와 자사고 선호도가 하락하게 되니 고입 경쟁을 위한 사교육비는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선지원 후추첨제가 도입된다면 더욱 내려갈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입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에는 분명 효과가 있다. 대치동과 목동을 중심으로 과학고 영재학교 대비 심화, 선행 프로그램의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문제는 대입을 위한 전교 1등 경쟁을 위한 사교육비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도 역시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민통합입시로 선발할 학생의 지원자격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4. 학교교육 혁신을 위한 추가적 장치 마련해야

발제와 저서를 바탕으로 국민통합입시와 학교교육 혁신과의 상관관계를 고려 할 때, 이 두 가지가 섞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즉 ‘국민통합입시를 도입하면 학교교육 혁신이 되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분명 이 입시방안은 학교교육 혁신을 기대효과로 하고 있다. 학교교육 혁신 방안은 언급하고 있다. 고교내신 절대평가와 고교 학점제를 실시하고, 교사별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객관식 시험을 지양한다는 방안은 학교교육에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혁신 방안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통합입시를 도입한다고 이러한 상황이 자동적으로 연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간 대입에서 5지선다형 문제풀이 중심의 수능의 강한 영향력은 학교의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는데 장애 요소였다. 그런데 수시는 30%로 하면서 지원횟수를 1회로 하고, 정시는 70%하면서 지원횟수를 8회로 늘리면 학교 교육 혁신을 견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정시의 전형요소가 ‘고교내신+수능+비교과’ 라면 수험생 부담은 더욱 커진다.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재현되는 상황이다. 고교내신이 혁신된다는 전제 하에서 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국민통합입시를 상상할 때 학교교육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국민통합입시를 통해 학교교육혁신을 견인하려면 방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수능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하는 등의 추가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지역학교 할당제 100% 도입부터 하고 나머지 학교교육 혁신 방안이 추동되도록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가능하도록 하는 견인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국민통합입시의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세부 방안의 효과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방안의 지향점과 기대효과는 분명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제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과 우선순위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한다.

■ 제2토론

“다양성(창의성) 교육을 위한 국민통합입시” 토론문

이성대 (신안산대학교 교수)

발제자가 제안한 ‘국민통합입시’ 정책은 대학입시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토론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발제자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입시의 뿌리를 미국 입시제도에서 찾고 있으며 도입과정에서 미국제도의 핵심인 ‘인권’ 과 ‘공공성’ 의 누락으로 인해 심각한 왜곡이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발제자의 분석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면서 일부 다른 의견에 대한 토론자의 생각을 밝히고자 한다.

발제자는 우리 입시제도에서의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으로 원래 목적했던 창의성 교육은 사라지고 교육이 신분을 고착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게 된 것과 똑 같은 제도를 도입했는데 미국은 교육천국, 우리는 교육지옥이 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창의성교육에 대한 지적에는 동의가 되기도 하지만 미국이 교육천국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입시 제도를 논할 때는 미국의 입학사정관제와 유사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취한 점은 정확한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또, 미국 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 학비 부담으로 인해 대학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점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와 같은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불공정해 보이는 입시’ 의 해결책이 ‘인권’ 과 ‘공공성’ 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이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학입시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토론자의 판단으로는 미국의 대학입시의 핵심 기조는 대학의 ‘다양성’ 확보로 보아야 한다.

대다수 미국 대학의 기본 철학은 소수자 우대를 통한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이며 이것을 적극적 지원(affirmative action)이라는 용어로 대변된다. 실제로 2018년 하버드의 학부생 신입생 중 소수 민족 출신은 약 52%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15%, 히스패닉 12%, 아메리칸 인디언 또는 하와이 원주민 2%, 아시아계 미국인 23%) 이런 소수자 우대 정책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법적 소송(Grutter v. Bollinger(2003) 판결, Fisher v. University of Tex. at Austin(2016) 판결) 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소수자 우대 정책이 입학사정에서 학생 구성원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특정인종에 대한 선호는 정부의 긴절한 이익에 해당하므로 위헌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Grutter v. Bollinger(2003) 판결에서는 입학사정에서 학생 구성원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특정인종에 대한 선호는 정부의 긴절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³⁾. 이와 달리 Fisher v. University of Tex. at Austin,(2016) 판결에서는 주요한 원칙으로 대학이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과하는 한 학생구성원의 다양성으로부터 나오는 교육적 혜택을 추구하는 것은 학교의 판단이라는 과거의 판례와 달리 대학당국의 인종고려 입학조치가 ‘엄격심사’를 통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원 스스로 확인하고 검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점이 Grutter 판결과 차이가 있다⁴⁾.

이들 판례에서 증거되는 미국 대학입시의 큰 원칙은 다양성의 추구이다. 그 다양성이란 기계적인 인종적 혼합만이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가능성과 재능 그리고 학교에서 개인적 성취가 첫 번째 기준이며 다양한 사회적 배경이 제공하는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인종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물론 적극적 지원(affirmative action)은 역사적·사회적으로 차별받은 소수자 집단에 소속된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아 공공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섞이는 과정에서의 교육적 효과를 위한 다양성이라는 구체적인 가치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최경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9권 제1호 (2014. 9)

4) 헌법재판연구원 자료

대학에서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중요한 가치로 두는 것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학문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그 내부에서 생기는 경계에서의 갈등과 해소의 과정에서 창의성과 협력의 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입시의 문제는 성적중심의 학생선발 구조이며 이로 인해 대학을 이루는 학생구성에서 심각한 획일화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학생의 성적에 미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영향력과 우리 입시에서 평가하는 지식의 편중을 고려하면 대학이 선발하는 학생 구성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발제자의 문제의식에서 좀 더 나아가 다양성이라는 구체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 뿐 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학생의 학력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 미국에서도 이런 점에 주목하고 이를 보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기본적인 입시의 기준은 학생의 재능과 발전 가능성, 개인적 성취 등 우리나라의 학생부종합전형과 큰 차이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입시의 문제는 미국의 제도를 잘 못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하기보다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우리사회의 문화적 배경, 활용하는 당사자들의 문제와 이런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한 정책당국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발제자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대안이 만족시켜야 할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대안이 만족해야 할 원칙은 교육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며 협력과 창의성을 강화하고 학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원칙에 따른 새로운 대안으로 국민통합입시를 제안하고 있다. 발제자가 제안하는 국민통합입시는 서울대가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지역균형선발(정운찬 총장시절 도입된 제도로 2020년 신입생 기준 23.8% 수준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일종이다)을 10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덧붙여서 서울대가 100% 지역균형선발을 도입하면 지방의 국립대, 서울의 명문 사립대, 더 나아가서 전국의 모든 대학에 이러한 정신이 퍼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하고 있다. 이 제안을 서울대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설령 서울대가 100% 지역균형선발을 하더라도 발제자의 생각처럼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는 희박해 보인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의 입시제도(상위 10% 정책(Top Ten Percent Plan))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텍사스 주의 상위 10% 정책은 텍사스 주립대학이 텍사스의 고등학교에서 상위 10% (텍사스 주립대 오스틴의 경우 6%이내가 선발됨)학생들에게

자동으로 입학할 허가하는 제도로 신입생의 75%를 이 제도로 선발한다. 그러나 이 제도에서도 25%는 입학사정관제도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학생의 재능, 가능성과 관심, 학업이나 개인적 성취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제도 도입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제자는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조치로 내신 성적 산출 방법의 개선과 함께 절대평가 등급화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런 주장은 일반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내용이므로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교사별 평가의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지 못해 아쉽다. 그러나 발제자의 주장에서 학생이 평가에 참여한다고 해서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처럼 기술된 것은 또 다른 논리적 비약으로 보인다.

특히 상대평가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상대평가가 경쟁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지만 평가의 공정성에 민감한 측에서는 포기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절대평가를 곧바로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대안으로 대학에서 도입하고 있는 등급의 비율을 일정하게 지정하는(현재의 등급보다 더 느슨해야 경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절대적 상대평가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양자택일보다는 학점제의 정착으로 다양한 학생들의 가능성을 고려한 과목 선택권과 다양한 수준의 과목 개설로 한줄 세우기 식의 비교가 불가능하게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수시축소(30% 이내로)와 정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내신교과를 통해 1차적으로 거르고, 그 다음 수능으로 변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발제자가 제안한 정시의 방식이 현재의 수시에서 수능최저를 반영하는 학생부교과전형과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데 이런 방식으로 수능 변별력 논란이나 학교 현장에서 수능 중심의 문제풀이 수업과 같은 문제 중 무엇을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된다.

발제자는 학종의 공정성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입학사정관(교육부의 교육과정을 인수 후 자격증을 획득한 전직 교수 및 교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시민 입학사정관)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지원자에 대한 판단은 공공입학사정관을 포함한 3명의 입학사정관이 민주적으로 토론을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공입학사정관제도는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토론자도 여러 차례 제안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학종의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발제자의 전망은 너무 문제를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 여기에 학생들의 부담과 부모의 경제력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비판을 고려해서 학생부를 간단히 점수화해서 보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학생부를 둘러싼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교육적 효과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음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국민통합입시 도입을 위한 실행계획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현실적인 제안으로 보인다. 특히 학교 할당에 대해서 최대에서 최소비율만 정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되 학교의 규모에 비례해서 배분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지역균형선발과 관련해서 논란 없이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안으로 판단된다.

발제자는 우리나라의 현재 대학입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새로운 대안이 갖추어야 할 원칙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대안과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발제자의 접근은 현실적이며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대 입시를 100% 지역균형선발로 하도록 하는 제안은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정시 확대 주장은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담겨있지만 학교 내신에 대한 불신과 학교 내신이 좋지 못한 학생들의 제 2의 기회라는 차원에서 수능시험을 통한 대학입학기회 제공에 대한 요구가 함께 담겨있다. 이런 점에서 지역균형선발 100% 입시는 상당한 반발을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성공적인 도입을 장담하기 힘들다. 또한 수시 축소 주장은 현재 수능확대론자들의 입지를 강화시켜서 또 다시 고등학교 교육의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발제자의 주장처럼 1차 내신 선발과 2차 수능반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수능최저 반영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수능에 대한 부담과 몰입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발제자의 제안은 국립대부터라도 지역균형선발을 확대하여 학생 부교과 전형으로 운영한다면 정부의 수능확대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단 이 경우 수능최저기준 적용은 배제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는 지역균형선발을 의미하는 국민통합입시를 제안하면서도 정시확대, 입학사정관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물론 지역균형선발을 100%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안으로 이런 제도 개선이 병행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발제

자의 여러 가지 제안들의 연계성을 발견하기 어렵고 일부는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 제3토론

이기정 (구암고등학교 교사)

■ 제4토론

백년지대계? 당장 10년 교육을 살리는 입시 대책이 절실하다!

백선숙 (학부모)

교육문제에 관심이 높은 편이었지만, 아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학종이니 수시니 정시니 하는 용어가 낯설기만 했다. 복잡한 입시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고3 학부모라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변화를 요구한다고 해도 내 아이는 제도 혜택을 못 보는 게 현실이다. 학부모라는 입장이 늘 그럴 수밖에 없다. 아이가 어릴 때는 대입 문제가 막연하고 멀기 때문에 나서지 않고 문제를 제대로 파악했을 때는 내 아이가 직접적인 제도 개혁의 수혜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서지 않는다. 학부모들이 오로지 내 아이만을 바라보는 이해득실 차원을 떨쳐버리고 모두의 아이를 위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나왔다. 아마 아이가 고3이 아니었어도 심지어 학부모가 아니었어도 이런 자리가 있다면 나왔을 것이다. 그만큼 입시개혁은 정말 다급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발제문을 받아 들고 특히 공감했던 부분도 그것이다. 모두가 다 각자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교육이 가야 할 옳은 원칙에 대해 타협을 먼저 할 것, 백 번 공감하고 천 번 지지하고 싶은 제안이다.

큰 틀에서 국민통합적 공평성이 확보된 선발 방식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적극 찬성하며 사회통합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입시개혁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적 프로세스 또한 지지한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더 큰 갈등을 낳을 수 있는 첨예한 쟁점이 입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해 정부의 미성숙한 입시 공론화 과정으로 야기됐던,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 집단 간의 극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개개인으로 나약

하기 이를 데 없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살리는 한 방향으로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욕망의 난투극을 벌이는 모습은 더 큰 절망감을 갖게 했다. 너무 오랫동안 경쟁 교육에 체화되어 버린 우리 모두는 이제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개인 간의 신뢰가 많이 무너져 버렸고 교육에 관한 건강한 담론도 생산적인 연대도 무력해지고 있는 상태로 보여진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육과 입시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더 어린 연령의 아이를 둔 부모들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 송파 헬리오시티에 입주하는 어린 자녀의 엄마들이 분기탱천해서 혁신 초 건립을 반대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주변의 집값을 올려놓을 정도였던 혁신학교의 인기는 이제 옛 얘기가 되어 버렸다. 혁신 초 반대를 주도했던 맘 카페 회원 중 한 엄마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혁신학교가 애들 학력을 떨어뜨려 입시에서 불리하다’ 고 하면서 교육 혁신이 다 무슨 소용이냐? 대학 못 가면 인생 끝인 데... 어릴 때부터 매달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입시라는 괴물이 우리 아이들과 부모 삶의 모든 가치와 철학을 이렇게 무참히 삼켜버리는 지경이 된 지금, 우리나라 교육시계는 도대체 언제부터 멈춰왔던 것일까? 정부와 교육부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자칭 타칭 교육전문가는 다 어디에 있었으며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인가? 물론 자신의 욕망을 쫓아 부은 그릇에 아이를 빠뜨리기도 미안해할 줄 모르는 부모들 또한 피해자라고만 할 수도 없다. 이 땅 어느 교육이란 이름의 자리에도 아이들은 없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때론 탐욕스럽기까지 한 어른들만이 교육을 쥐고 흔든 결과이다.

대한민국 교육의 실상과 민낯을 처절히 밝혀낸 ‘대한민국부모’ 라는 책에서 저자는 ‘해방 후 60년 넘는 시간 동안 교육다운 교육을 해 본 적이 거의 없다’ 고 말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사실 진정한 교육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외피만 쓰고 있을 뿐, 텅 빈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빈 공간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쑤셔 넣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의미를 잃은 학습 노동이 대한민국 아이들 수백 만 명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는 지? 공부지옥 시험지옥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지?” 낱알이 밝히고 있다. 발제문에도 제시되었듯이 몇 번의 교육개혁이란 이름으로 고교체계가 바뀌고 입시가 바뀌어 지금의 학종으로 대표되는 수시전형과 수능 정시 전형의 입시에 까지 이르렀지만 지금의 교육은 우리 사회의 가장 천박하고 부정적인 담론으로 나뉘어 가는 지경이 되었다. 입시가 마치 교육의 목표이고 내용의 전부인 양 되어버린 우리 현실에선 교육이 이미 교육이 아닌 것이다. 지금 결과적으로 과거 교육이 낳은 사회의 실태가 이렇게 되어 버린 이상 우린 퇴보의 길을 걸어왔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늦어도 한 참 늦었다. 우리의 교육시계는 50~60년전에 거의 멈춘 채 미세하게 초침만 조금씩 움직이고 있을 동안, 핀란드, 미국, 일본마저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교육의 역사를 새로 만들어 가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한다. 난 아직도 현 정부가 ‘사람이 먼저다’ 라는 인본주의적 국정철학을 갖고 출범했음을 기억하고 있고 그런 바탕 위에서 마지막까지 교육의 나침반을 놓지 않을 거라는 한 가닥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촉구하는 일에 나서고 싶은 학부모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 발제자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살리는 입시개혁과 국민운동에 적극 찬성하고 지지한다.

다만 몇 가지 발제자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좀 더 현실 가능하고 발전적인 개혁의 그림을 토론해 가고자 한다.

1. 미국 입시가 인권과 공공성이 보장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립대 위주의 엘리트중심 교육, 지나치게 편향된 선발제도와 강압적인 교육시스템에 대해 많이 비판받고 (예일대 교수 출신 윌리엄테레저위츠의 ‘공부의 배신’ 참조) 미국 내에서도 자성과 회의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 입시가 이상적 모델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2. 우리나라 교육문제, 특히 입시문제의 정점에는 대학 서열화가 버티고 있다. 국민통합적 균형선발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서울대를 중심으로 하는 서열화를 완화시키는 특단의 대책, 가령 국공립대 네트워크라든지 공동 학위제 같은 대책이 병행되지 않는 한 여전히 입시 과열의 불씨는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통합선발 과정을 통해 서열이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근거에 대한 논의가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

3. 학종이 부모들에게 부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죽어라 공부하고도 예측 불허한 합격 여부’ 라는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신뢰가 약한 사회 구조에서 선발자나 기관에 대한 불신이 높고 비리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우리 나라에서 학종의 결과는 투명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통합입시에서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오히려 차별 받은 사회적 집단에게 더 기회와 가산점을 주는 것을, 일반 대중(특히 학부모)들이 용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4. 발제문에서도 언급하신 부분이지만,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교육주체로 설 자리가 아무데도 없다는 점이다. 14살 스웨덴소녀가 유엔기후협약에서 세계기후 환경전문가 어른들을 상대로 당당히 발언하는 것을 보셨는가? 우리가 이제 학생

들을 교육의 주체로 더 많이 인정하고 주권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절실하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실행계획 단계에서 우리 사회의 현실적, 사회적 합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지 검토해 볼 부분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깊고 넓은 범위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 줄 알면서도 감히 그 실체에 접근조차 꺼리는 ‘교육과 입시’라는 조용하고 거대한 강물에, 이렇게 신선한 파문과 소용돌이를 일으켜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표하고 싶다. 고이고 썩은 채 흐르지 않는 강물과도 같았고 오랫동안 세상의 변화에 등돌리고 멈춰선 고장 난 시계와도 같았던 우리 교육과 입시, 그 속에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내 아이는 다행히 잘 버티는 구나’라는 안도감조차 부끄럽고 죄스러운 현실이다. 내 아이의 부모로서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어른으로서 잘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고색창연한 구호에 불과한 ‘백년지대계로서의 교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장 ‘10년 교육’을 살리는 입시개혁을 위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종합토론

